

교토시, 빈집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68988.html>

일본 교토시는 늘어가는 빈집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교토시가 2013년 수행한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총 주택 수 가운데 빈집 비율이 14%에 이르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빈집의 증가가 방법, 방재, 지역 커뮤니티 유지, 생활환경·경관 조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교토시 빈집 활용 및 적정관리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빈집 활용·유통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빈집 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빈집 발생을 예방하고 고자 관련 내용을 담은 책(『空き家の便利帳』)을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법무사와 시 공무원이 지역민들에게 빈집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찾아가는 강좌’를 개최한 바 있다.

10월에는 빈집 소유자를 위한 상담회를 개최하고, 빈집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를 연결해 주는 매칭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또한 지역 부동산업자 등 전문가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하여 ‘지역 빈집 상담원’으로 등록하고, 지역민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민의 신청을 받아 건축사, 빈집 상담원을 파견하여 빈집 활용·유통·관리에 대한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 파견제도 또한 시행 중이다.

빈집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찾고 마을만들기 자원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빈집을 예술가 활동 공간, 지역 커뮤니티 공간, 유학생 주거지, 게스트하우스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빈집을 개보수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빈집을 마을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 받고, 우수한 제안을 실제로 적용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활용-마을만들기 모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교토시에서 제시하는
빈집 활용법

자료: 京都市, 『空き家の便利帳』, 2015.
(<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61/181061/bennrityou.pdf>)

미국, 스마트시티 연구개발과 시스템 구축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 발표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5/09/14/fact-sheet-administration-announces-new-smart-cities-initiative-help>

최근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25개 이상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교통체증 감소, 범죄 예방, 지역경제 성장, 기후 변화 관리, 지역문제 해결 및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오바마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특히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과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수행하는 스마트시티 연구 개발에 총 4,500만 달러 투자
- 안전, 에너지, 기후, 교통 등 새로운 문제 해결 방안 제공을 위하여 5개 연방정부기관*이 부처별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총 1억 1,500만 달러 투자
- 미국 내 20개 도시와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문제 해결에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또한 사물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테스트베드 창출과 멀티 협력 모델 개발, 공동체 간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국제협력 강화, 기존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연계가 새로운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의 주요 전략이다. 이 가운데 5개 연방정부기관이 부처별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부처	추진 프로젝트
국토안보부	· 최첨단 긴급대응기술 개발 · 차세대 긴급구조원 에이펙스(Apex) 프로그램
교통부	· 스마트시티를 위한 차세대 교통시스템 개발 · 커넥티드 카(Connected Vehicle) 시범 프로젝트
에너지부	· 스마트시티를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저탄소 도시 구축 지원 · SMART** Mobility 컨소시엄 · 스마트빌딩 구축 지원
상무부	· 지역문제 해결 및 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전략 자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
환경보호청	· 저비용의 대기오염 센서를 이용, 대기질 연구 수행 지원 · 빌리지 그린 프로젝트(Village Green Project): 대기질 모니터링 테스트

미국 정부는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기업·비영리기관 등 공동체와 협력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0곳이 넘는 도시 대학 간 협력 공동체인 메트로랩 네트워크(MetroLab Network)가 결성되었으며, 내년에는 60개 이상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EDA),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SMART: Systems and Modeling for Accelerated Research in Transportation

호주 최대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린스퀘어’ 윤곽 드러나

<http://www.sydneymedia.com.au/green-square-growing-at-record-rates/>

10년간 진행되고 있는 호주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린스퀘어(Green Square)’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그 목적과 의의가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린스퀘어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시드니 도심과 국제공항, 시드니 구 산업지역 278만m²의 땅을 대상으로 1995년 설계공모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그린스퀘어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서서히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드니에 인프라 구축을 약속한 연방정부는 이에 드는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스퀘어 지역의 거주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410만m²로, 2009년 8조 달러로 예상한 투자금은 2015년 현재 13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그린스퀘어의 거주 예정자는 2030년까지 5만 4,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약 2만 1,000개의 직업군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Clover Moore)는 그린스퀘어가 고용 확대,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 사회기반시설의 연계성 확보, 풍부한 문화 활동 및 훌륭한 디자인의 건축물 건설 등을 통하여 거주민의 편리한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며 그린스퀘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시드니에 부족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며, 근교의 산업부지를 확보하여 근거리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린스퀘어의 성공을 위하여 시드니 시는 도로, 인도, 도로 시설물 및 보육원, 도서관, 공원 및 놀이터 등의 지역 편의시설에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어 시장은 개발의 가속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새로운 학교 설립과 부족한 교통시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그린스퀘어 거주민 가운데 학생이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학교가 부족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금 분배를 늦추고 있다. 지하철처럼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통시설 또한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무어 시장은 그린스퀘어 커뮤니티를 지켜 나가기 위하여 투자금 유치 및 경전철 등의 교통시설 마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린스퀘어 프로젝트 개요

도시재생 면적: 278만m ²	지역기반시설 면적: 51.6만m ²
도심 면적: 14만m ²	- 도로: 34만m ²
도시재생 총 건설비용: 13조 달러	- 공공용지: 14.7m ²
단위 면적당 인구 수: 22,000명/km ²	- 도시편의시설: 2.8만m ²
	지역기반시설 총 건설비용: 1조 3,000억 달러

호주 멜버른 사유지 매입, 공공용지 확장을 위한 노력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Firstprivatelandpurchasedinplantoexpandopenspace.aspx>

2015년 9월, 호주 멜버른 시는 웨스트 멜버른에 위치한 호크가(Hawke Street)와 애덜리 스트리트 파크(Adderley Street Park) 근방의 사유지를 170만 달러에 구입하였다. 이는 도심 공공용지 확보 및 확장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사유지를 구매한 첫 번째 사례이다.

멜버른 시장 로버트 도일(Robert Doyle)은 호크가의 사유지 매입은 향후 15년간 공공용지의 면적을 24만m²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계획 중 일부라고 밝혔으며, 시의회는 기존 대지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을 해체하고 1,800m²까지 공원을 확장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사유지의 구입 가격은 2015년 3월 특별위원회를 통해 승인되었으며, 9월 170만 달러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멜버른 시는 가까운 시일 내로 공원 전체 공간의 리뉴얼 및 확장 계획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원 내의 놀이터 등 기존 여가공간이 개선·확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원 애런 우드(Arron Wood)는 멜버른 공공용지 계획(Melbourne Open Space Strategy, 2012)과 노스웨스트 멜버른 지역 계획(North West Melbourne Local Plan, 1999) 모두 공공용지의 보호·확장을 위한 것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웨스트 멜버른의 거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아파트 거주와 함께 도심 속에서 점점 축소되는 뒤뜰을 언급하며, 공공용지를 더욱 확장하여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의 여가 및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이번 사유지 구매는 시의원회의 공공용지 투자금으로 진행되었으며, 멜버른 시는 다양한 공공용지 확충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기존의 500만m² 공공용지를 확장 및 개선할 예정이다.

2015 세계 주거의 날,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이란?

<http://www.pps.org/blog/public-spaces-celebrating-world-habitat-day-2015/>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2015 세계 주거의 날은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을 주제로 공공공간의 현재를 되짚어 보며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힘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재인식시켰다.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 |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s Square), 런던의 피커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처럼 어떤 도시를 생각하면 그곳의 대표적인 거리, 공공공간이 함께 떠오른다. 이와 같이 거리나 공공공간이 하나의 도시를 특징짓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와 공공공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공간’은 ‘공공’, 즉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전제한다. 하지만 차를 가진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고속도로, 빈곤층·노령자·어린이·여자·소수인종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처럼 ‘공공’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를 위한 공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공간을 모든 이가 누리지 못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차별 | 여성의 공공공간 이용을 한정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 폭력 등이다. 전 세계 도시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에 대하여 해비타트는 “성차별은 오늘날 공공공간이 지닌 평등성을 저해하고 있다”라며 “이는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기본적인 서비스와 문화, 여가생활을 즐길 기회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학교, 직장 등에서의 사회생활을 비롯하여 공공생활을 해나갈 능력을 감소시킨다”라고 강조하였다.

신체적 차별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노인 및 신체장애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 건강, 위생, 교육, 교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집에서 먼 거리까지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합용도시설 개발은 그들이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공공생활을 즐기며 자신 또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세계 주거의 날

자료: UN-해비타트 홈페이지(unhabitat.org/public-spaces-for-all-21)



©Public Workshop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캠던, 뉴저지)

연령 차별 | 과도한 법적 규제, 놀이 공간 부족, 소비 집단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점 등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공공공간 이용을 막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식수대, 공중화장실 등 시설의 부족이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 공공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케이팅보드를 타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청소년기 특유의 일탈 행동을 통해 스스로 공공공간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경제적 차별 | ‘공공공간은 가난한 자들의 거실’이라는 말이 있다. 가난한 도시민과 노숙자에게 공공공간이란 사회생활, 여가, 비공식적인 경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이며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룹의 통합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공간은 노숙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되며, 그들의 이용을 무시하곤 한다. 모든 이를 위한 공공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유입을 인정해야 한다.

새로운 도시를 위한, 도시공간 조성의 중요성 | 공공공간의 부족,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가로 조성은 결국 도시 불균형을 가속화한다. UN-해비타트는 공공공간의 확대와 더불어 나이,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공간 제공을 새로운 어젠다로 설정하고 인식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주도의 공공공간 만들기(place making)가 강조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 공공공간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과거 공공공간 조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사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UN-해비타트는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을 올해 테마로 정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은 말로 설명하였다.

“물리적 환경 설계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넓은 보도와 상업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낮은 빌딩을 만들고 교차로 사이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또한 좋은 공공공간은 외부 사람의 유입을 늘리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생활과 참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이라는 목표가 생긴 이유이자, 도시 계획 및 디자인 과정에서 공공공간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이다.”